

행정자치부

주의요구·통보

제 목 상위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조례 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지급
방법 부적정

기 관 명 강원도

관 계 기 관 철원군

내 용

철원군에서는 2016. 2. 18.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조례 제2332호)를 제정하면서 위 조례 제5조제2항에 각종 공사 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 권장 및 수당 등의 상품권 지급에 관한 사항²⁴⁾을 규정하였다.

1. 법령을 위반하는 조례 제정 부적정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제4호 등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사실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에 규정되는 사항은 법률에 근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가.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시행령 제90조의2 등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

24) 위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르면 ‘군수는 상품권의 판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 각종 행사·공사·용역·물품구매 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고, 각종 시상금, 보조금,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수당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규정하였다.

그 결과 위 관서에서는 위 조례 제정 직후인 2016. 3월부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중 일부를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게 되었다.

나.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시행령 제90조의2 등에 따르면 지출원이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을 할 때에는 현금의 지급을 갈음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하고 현금지급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금융기관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지방계약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등에 따른 선금급, 기성급, 준공급 등의 대가 지급시 계약상대방에게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행위에 관한 사항, 즉 사실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²⁵⁾는 법률의 근거 없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25) 가령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계약상대방이 앞으로 발주청인 고성군의 계약상의 지위 또는 지방계약법상의 감독·검사 권한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수도 있고,

비록 위 조례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관급 공사 등의 선금급, 기성급 등을 지급하면서 발주청이 상품권 사용을 권장하는 행위는 상품권을 구매할 의사가 없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지방계약법상의 감독·검사 등의 권한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품권을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을 만들어 낼 가능성이 높고 이는 결과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²⁶⁾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위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계약법 제6조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등의 목적과 취지를 위반하는 ‘각종 행사·공사·용역·물품구입 등 대가 지급시 상품권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의 근거 없이 규정하였다.

2. 지방공무원 보수지급 방법 부적정

철원군에서는 2016. 3월경부터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 소속 공무원 보수의 일부를 철원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으로 대체지급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 「지방재정법」 제70조 및 같은 시행령 제90조의2 등에 따르면 보수는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또는 요구불예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위 관서에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보수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실제로 ○○○○협회에서는 2016. 8. 16.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대가지급시 상품권 사용 권장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0조의 현금지급 원칙에 위배되므로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상품권 조례가 폐지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확산·계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여 달라는 민원(자치법규 개선관련 건의)을 행정자치부에 제기하였음

26) 관급공사에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고용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등(「통영시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조례안」 제5조 등 관련)에 관한 법제처의 의견제시 내용 참조[법제처 의견12-0263, 2012. 9. 4, 경상남도]

그런데도 위 관서에서는 공직자부터 솔선하여 자발적인 동참으로 관내 소상공인 등의 소득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공무원 개인별 보수 공제에 대한 원천징수동의서를 받고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함을 알리고 [표 1]과 같이 매월 직급별로 보수의 일부를 공제하여 [표 2]와 같이 2016. 3월부터 2016. 9월 현재까지 420,303천원을 상품권으로 대체지급하고 있다.

[표 1] 직급별 상품권 공제금액 (단위 : 원)

구분	5급 이상	6급	7급	8·9급 지도·연구사
공제액	250,000	150,000	100,000	50,000

[표 2] 직급별 보수의 상품권 대체지급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5급 이상	6급	7급	8·9급 지도·연구사
대체지급액	420,303	52,430	181,293	124,839	61,740

(자료 : 철원군 제출자료 재작성)

조치할 사항 철원군수는

[주의] 앞으로 소속 공무원의 보수를 지급하면서 「지방공무원법」 제18조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법」 제22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